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7/ 13 통권 1579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 끝이 좋아야 한다(3)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재화·용역의 10% 부가세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간
이과세 제도 비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
리 지적사례 공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전기료 정감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투자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법인이 외부에서 자산취득시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의 법인세 규정〉

구분, 개념	취득가액계산방법, 결정방법 등	관련규정
외부매입	매입가격 + 관련세금(취득세, 면허세, 농특세, 지방세)과 부대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토지 + 건물	건물기준시가 건물가 = 총 취득가 × $\frac{\text{토지공시가} + \text{건물기준시가} \times 10\%}{\text{토지공시가} + \text{건물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및 부분
자가제조 등	제조, 생산, 건설에 투입된 원재료 + 노무비 등 + 관련 제반부대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합병, 분할	장부가액 등(적격합병, 분할규정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물적분할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현물, 출자	출자 후 주식만 취득 : 순자산시가, 일반적인 경우는 : 발행주식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단기금융상품	매입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2호
공익법인 기부	· 특수관계이외자의 실물자산 기부 : 장부가액 또는 원취득가액 · 기부 후에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되어 증여세 납부 시 : 기부당시시가 · 기부시 증여세 등이 없었던 경우 : 장부취득원가 등 (증여세 없이 취득원가증액하여 양도세가 감소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목적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평가액, 자본적 지출가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9호 / 주간 28호

2022. 7. 13. (수)

· 발 행 인 : 이 윤 언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이 외부에서 자산 취득시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의 법인세 규정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재화·용역의 10% 부가세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간이과세 제도 비교	2
C E O 에 세 이	CEO는 사람을 경영한다(1)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 입금 처리에 대한 문의 - 정부지원 사업 관련 부가세 공제 문의 -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요 세제 개편 방향 - 야당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법안 내용	9 10
직 장 인 Survival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9가지 특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법안-1785, 2021.12.29) -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법령법안-7523, 2021.12.3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신고 613만명... 코로나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전기료 정감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투자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됨	12
세 무 정 보	-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15 40
회 계 정 보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9

재화 · 용역의 10% 부가세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 간이과세 제도 비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
적용 법규	부가가치세법 전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등
사업자 유형	일반사업자	수출, 외화 획득	생존 필수품	특정사업 부가세	간이과세자
지원목적	일반, 없음	수출지원	소비자가 10% 인하	생산원가 지원	영세사업자
과세원칙	국내소비지 과세원칙	해외소비지로 과세권 없음		작물재배농민 등 지원	연매출 8천만원 이하
매출 세금계산서	10% 받음	0%	0%	농업, 어업, 임업 등 면세	발행함 (상대방 공제됨)
매입세액	10% 공제	10% 공제	공제안됨	농업기자재 구 입액의 부가세 환급	공제안됨 (매입액×0.5%)
부가세 효과	일반과세	전액 면제	부분 면제	특정 면제	일부 면제
부가세 신고	일반신고 (매출 - 매입) ×10%	영세율 일반신고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안함 (매입세액 명세만 제출)	환급대행자나 해당 농어민 (사업장 관할)	6개월 매출×부가가 치율×10% (부가가치율: 소매 · 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 · 기타 30%, 전문직 40%)

CEO는 사람을 경영한다(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나의 일생은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골몰하는 것이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호암(湖巖)이병철 회장의 술회였다.

그렇다. 인사는 만사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던 전직 국가최고경영자조차 그의 측근과 아들까지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았는가. 또 두눈 뜨고 IMF외환위기에 한국을 몰아넣기도 했다. 민주화투쟁과 사람경영은 별개인 모양이다.

단 한마리의 여우로는 흰 털옷을 만들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모든 털이 완전하게 흰털로만 된 여우가 없어서다. 얼굴이나 귀 그리고 등이나 배 또는 꼬리 어느 부분에 다른 색깔의 털이 꼭 섞여있다. 그래서 여러 마리의 여우가 합쳐져서 완벽한 흰털로만 된 옷을 만들 수 있다.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오(吳)나라 초대황제 손권(孫權)의 인재관이다. 즉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각 분야의 인재를 고루 모아 함께 일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구색을 갖춘 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EO가 꿈꾸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저마다 강점이 다른 사람 모아야

대학 때부터 막역한 친구 사업가 스토리다. 명문 K고교에 S대학출신인 그는 당시 한창 수출 드라이브 고속성장 속에서 '무서운 아이들'로 불리며 잘 나가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가며 툴툴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 회사는 여직원 빼고 사장서부터 말단까지 소위 엘리트 출신으로 딱 차 있었다. 그것도 거의 K고교에 S대 출신으로. 그러니 사장 동기가 상무이사고 또 이사는 그들 후배이며 과장 또한 그러했다. 모두가 눈알이 충충하여 말귀 또한 빠르게 알아듣고 매너도 그만이었다. 뭘 알아보라고 하면 재빨리 알아본 후 '레포트(Report)'에는 모두 귀신이였다.

하지만 기업이 어디 연구소인가, 대학원인가.

레포트는 잘할지 모르나 도전과 추진 그리고 돌파력은 영 시원찮을 수밖에 없었다. 정보 취재 원도 거의 비슷해서 목소리조차 다양치 못했다. 또 선배를 추월하여 일 잘하기도 힘들었다. 결국 도산의 아픔을 겪었다.

동료애로 공개토론 거쳐야

100년 전통의 D그룹 주력기업 몰락도 흥미할 만하다. D그룹의 오너 CEO는 3대에 걸친 부(富)를 누렸다. 게다가 대대로 공부도 잘해서 모두가 명문대를 거쳐 선진국에서 학업을 거친 후 경영 수업을 받고 CEO에 올랐다. 그러니 그 앞에 감히 '한 말씀'드릴 중역이 있기 힘들었다. 아예 목소리가 없어지고 명령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주력기업은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커피왕국 스타벅스 CEO하워드 쉘츠의 성공은 빛난다.

쉘츠 회장은 종업원을 반드시 '파트너'로 부른다. 요컨대 사람 대접을 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월마트도 개방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트럭 운전자도 최고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다. 따라서 CEO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선결과제다. 동시에 인재의 조합은 물론 적재적소 배치와 신상필벌이 기본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제갈공명의 주장이다. '지략이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두뇌, 이쪽과 저쪽의 허(虛)와 실(實)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는 눈과 귀, 강인한 추진력을 구비한 팔과 다리를 곁에 두어야 한다.'

그런 구성원들로 하여금 난상토론을 하도록 하여 공개검증을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달성을 위한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Q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 입금 처리에 대한 문의

Q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사업) 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입금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기타 수익 또는 비용(인건비)으로 혹은 다른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국가 등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해당 금액을 지출할때는 지출항목에 맞게 비용반영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사업 관련 부가세 공제 문의

Q 당사는 정부지원으로 인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은 공급가액은 정부지원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부가세만 당사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한 사업에서는 공급가액, 부가세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세액불공제가 맞는지, 맞다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잡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문의

Q 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자소득을 낸 B법인이 소액부징수로 인한 세금 10원 미만 절사한 합계가 1,500원일 경우 B법인이 세금환급 신청시, 환급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원천세신고법인: A, A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했을 경우 / 환급신청법인: B)

※ A법인은 이자소득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 A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B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B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의 다양한 거래 형태로도 나타나므로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등 유사비용과 구분이 매우 어려운데, 접대비와 지출 형태가 유사한 비용들과의 구분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구 분	접 대 비	기 부 금
지출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등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원재료 등의 구매, 수익창출에 따른 답례,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등과 관련된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지출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 관계자로 거래상대방, 거래의 중개 · 알선 · 조정자, 사업의 지도 · 감독 · 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 기부금 인정단체가 아닌 자 등에게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와 판매부대비비용의 구분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 ·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비용으로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지출이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않는 비용이다.

구 분	접 대비	판매부대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현물제공	•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수당 또는 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액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 사전광고 등에 의해 거래처별 판매실적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어도 인정됨
할인료 등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하거나, 약정 또는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할인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할인하는 금액
경품 · 사은품 등	• 특정고객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등	•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품 및 사은품 등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상품 ·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이다.

구 분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출성격	• 업무와 관련된 지출	• 업무와 관련된 지출
지출상대방	• 업무관련 특정인	• 불특정 다수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반영

법인이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된다.

거래상대방	채권포기 유형	처리내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포기	손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채권의 포기	접대비
		손금불산입(기부금)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주요 세제 개편 방향

세목	새경방 발표 내용	검토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과표구간 4단계 → 2~3단계로 조정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세율 인하, 중과 배제, 재산세와 통합
상증세	가업승계 활성화	유산취득세로 통합, 공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화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2020)	개정(2021~)		현행(~2020)	개정(2021~)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야당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법안 내용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발제 의원
종합부동산세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2021년도 납세분까지 소급 적용	윤후덕
	다주택자(2주택자) 합산가액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김영진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시 합산 배제	윤후덕·신정훈
재산세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시가표준액 또는 2022년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하는 특례 도입	서영교
취득세	취득세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 감면 대상 합산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서영교
전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소득공제 확대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율을 현행 40% → 80%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김영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율 10%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2% → 17%로 인상. 세액공제 적용되는 임차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 → 6억원으로 확대	김영진
임대차3법	'착한 임대인'에게 종부세·재산세 감면 : 신규 계약 시 전·월세 가격을 5% 이내 인상 시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김영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구분	공제율		한도
	2022년 이전	2022년 이후	
일반사업자	공급대가×1.3%	공급대가×1.3%	1000만원 (2023년 이후 500만원)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공급대가×2.6%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9가지 특징

1.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they see things objectively)

세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 중,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라.

2. 내려 놓을 줄 안다.(they let go of entitlement)

“언제나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운명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3. 냉정하고 침착하다.(they keep an even keel)

정서적 안정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다.

4.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they don't aspire to be happy all the time)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5.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이다.(they are realistic optimists)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지면습관적으로 다시 일어난다. 짜증내고 희망이 없다며 불평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6.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they live in the present moment)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만 바라보지 마라. 현재에 사는 것이 뇌 활동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7.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they are persistent in the pursuit of their goals)

“투지를 가지는 것은 장기적 목표를 이뤄낼수 있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놓아줄 때를 안다.(they know when it is time to let go)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쿨하게 놓아줘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포기해야 할 땐 포기하라.

9. 그들의 삶을 사랑한다(they love their lives)

우여곡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받아 들이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포용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전기료 절감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투자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됨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785, 2021.12.29

질 의

- 주식회사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월 에너지 절약('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
-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됨

질의

-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법규재산-1186, 2022.01.13

질 의

- 2011.3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A주택 취득(2020.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6.10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B주택(2020.6월 조

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조합원가입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2017.4월 사업시행계획 승인, 2020.7월 사용승인

- 2021.1월 A주택 양도계약 체결(2021.4월 잔금 수령)
- 질의

- 지역주택조합의 원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6, 2022.01.20

질 의

- 신청인은 ○○시 △△구 ◎◎로 28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1.6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22.1월 해당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건물은 주택으로만

임대하였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사실은 없음
질의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법령법민-7523, 2021.12.30

【질 의】

- A법인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 B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A법인 이 B법인의 자본 100%를 소유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 벤처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각각 43.25%, 17.3%를 보유하고 있으며
- '13.3.8. 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신주 1,000주를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며,
- 보유주식수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등의 사유로 2,752,400주(이하 '쟁점주식')로 증가하였으며
• '21.10.7. 투자조합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청산을 결의함과 동시에 투자조합 규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 배분하였으며,
- B법인은 배분받은 쟁점주식을 전부 A법인에게 매도할 예정이며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임

질의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적용시기

【회 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613만명… 코로나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곳 등 총 613명에게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 공급분에 대해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9.30.까지)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 코로나19 '호황업종'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

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

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2. 7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22.7.1.~'22.12.31.)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가치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22.10.1.)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22.3분기 중)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하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22 하반기)

- '09년 2학기~'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2.7.6.~'24.12.)

* (현재) 평균 4.9% (5.8%~3.9%) → (변경) 2.9%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22.7월~12월)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보건·복지·고용>

-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22.10.1.~)

*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 2·3형) 휴업급여금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최대 12개월) 지원('22.7월~)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22.8.18.~)

* (규모)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예정

** (과태료) 1,000(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시) 이하

<문화·체육·관광>

-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22.7.19.~)

<환경·기상>

-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25.~)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대상

-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22.7월~)

*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

** 텀블러, 다화용기 대여 서비스 등

-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22.12월~)

* (제공요소) 기후요소 4종(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종(폭염, 여름일

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2.8.4.~)
 -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화R&D+특례 지원
-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22.7월)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22.8.18.~)
-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22.8.4.~)
 - *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국방·병무>

-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11,000 → 13,000원, '22.7월~)
-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
 - * (기존)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 운영 → ('22.7) 부산·춘천에도 센터 신설

<행정·안전·질서>

-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22.7.12.~)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 도입('22.12.23.~)
-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

☐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6월 30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발체)

〈기획재정부〉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세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구분	과세표준	기본	우대 공제한도(~'23.12.31)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0%	65% → 75%	55% → 65%
	2~4억원		60% → 70%	
	4억원 초과	40%	50% → 60%	45% → 55%
법인사업자		30%	40% → 50%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 주요내용
 -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매주간장된장고추장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시행일

- (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2022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

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관세청〉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 2022년 3월 23일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배경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 법성 확립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 (등록 유효기간) 3년
 -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추진배경 :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 (現)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배경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 추진배경 :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 주요내용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시행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례보증은 '22.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심사 :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시행일 : 2022년 10월 중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



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
- 시행일 : 2022년 5월 3일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22년 20% → '23년 40%
(상호금융) '22년 20% → '23년 30% → '24년 40%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제2금융권의 총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총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주요내용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구 분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지급보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좌 동)
여신전문 금융	신용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	(좌 동)	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	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타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비카드	한도성 여신				
	상호금융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고객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 한도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합니다.

※ 이용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는 일간 최대한도는 1천만원(한도 도달 고객의 해당일 추가 출금이체 이용은 자동 중지 처리)

- 신설되는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중 제공됩니다.

- 추진배경 : 오픈뱅킹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 제공
- 주요내용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출금 전 일간 출금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잔여 출금한도 조회 API를 신설
- 시행일 : 2022년 10월 중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2.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개정 예정)



-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집니다.
- 추진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시행일 :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
-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 시행일 :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 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년 7월부터는

- ①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 ② 택배 자·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 ③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

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시행 : 2022년 7월 1일)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 (지원수준) 서버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판단
- 시행일 : 2022년 6월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예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다만,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2.7.) 제24조의2제5항 신설 및 최근 정보통신 산업 발전과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진입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

●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
- (도급가능한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2022년 6월 29일 시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
 -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통령령)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시행규칙)
- 시행일 : 2022년 6월 29일(법률, 시행령), 2022년 8월 (시행규칙)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①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 ② 계약방식 도입
 - ③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④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

- 시행일 : 2022년 12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2년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허R&D+특례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A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 신설

- 추진배경 : 美中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 시급
- 주요내용
 -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
-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2022년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22.1.4. 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

■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 필요

- 추진배경 : 산업데이터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②지원 제도, ③추진체계 등 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② '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 ('21.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1.4분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x × 보정률	×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조달청〉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하여,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현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기술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나,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적의무인증 보유 여부,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조 여부 등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개시합니다.

- 추진배경 : 전문가들의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 판매 가능
- 시행일 : 2022년 7월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이래로 도입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
-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①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②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③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④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고,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현행)중소기업에서 (개정)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
- 시행일 : 2022년 9월 1일

■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제안요청 발주지원을 위하여 AI기반 발주지원('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발주기관에 SW사업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자가진단,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참가자격과 평가항목 등 제안요청서 표준서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된 제안요청서 법령준수 및 요구

사항 오류 등 조달요청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발주기관에 AI기반 제안요청서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2022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

- 추진배경 :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쉽고, 빠르게, 정확히 작성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AI 기반 발주지원 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운영하여 ICT발주체계 선진화
-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참가자격', '평가항목' 등 공통사항을 Rule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도구 제공
 - 조달발주 지식베이스 및 유형별 제안요청서 비교진단 모델을 구축하여 AI기반 학습데이터를 통해 제안요청서 자가진단기능 제공
 -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유형별 제안요청서 지능형 검색서비스 제공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1일(금)	7월 4일(월)	7월 5일(화)	7월 6일(수)	7월 7일(목)
미 달 러 (USD)	1299.80	1294.20	1297.90	1298.00	1307.40
일 본 엔 (JPY)	957.18	957.14	955.43	957.05	960.93
영 국 파 운 드 (GBP)	1581.14	1566.95	1572.41	1551.95	1558.81
캐 나 다 달 러 (CAD)	1009.51	1004.81	1009.96	996.28	1003.15
홍 공 달 러 (HKD)	165.64	164.93	165.42	165.42	166.61
위 안 화 (CNH)	193.89	193.06	193.79	194.16	194.76
유 로 화 (EUR)	1361.87	1350.37	1354.10	1332.72	1331.33
호 주 달 러 (AUD)	896.86	883.10	892.63	882.25	887.07
싱 가 폴 달 러 (SGD)	935.01	927.28	929.99	923.71	930.7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4.91	293.67	294.11	293.70	295.4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 국세청, 2022. 6

질문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답변1)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인 임대인인 경우 〉

구 분	주택A	주택B	주택C
취득 시점	2018년	2019년	2020년
양도 시점	2022년	2024년	2026년
과세 여부	과 세	과 세	2년 거주 시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 시 2년 거주요건	-	-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2년 거주요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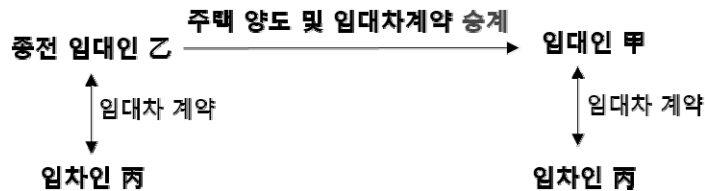
질문 2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때 “직전 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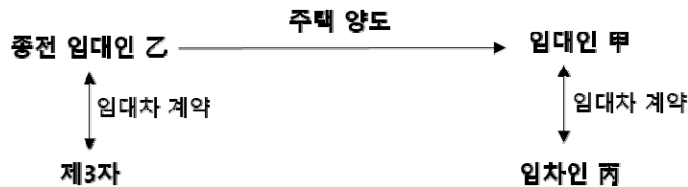
(답변2)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효과 등 감안 시 부적절

〈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 〉



〈 주택 매입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 〉



질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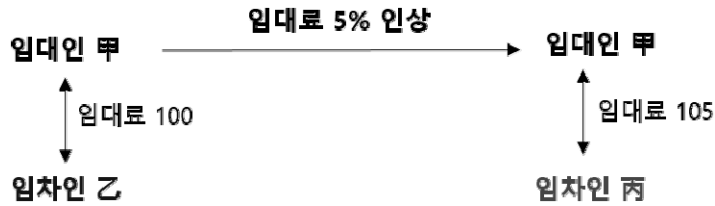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3)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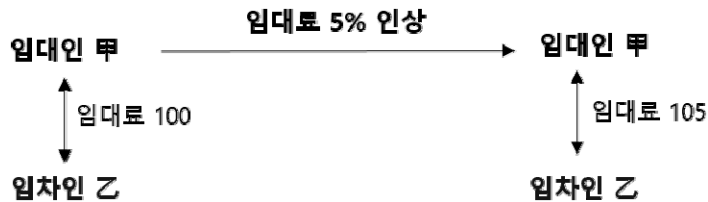
※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임차인의 동일성은 불요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계약주체: 임대인 동일, 임차인 상이한 경우 〉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계약주체: 임대인 동일, 임차인 동일한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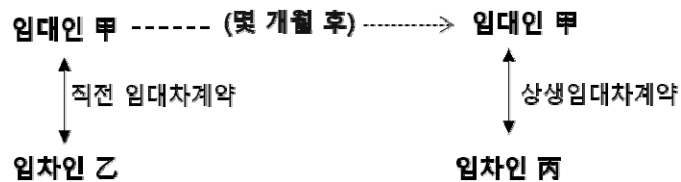


질문 4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

(답변4) 그렇습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



질문 5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5)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일반적 임대기간이 2년인 점 감안)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024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질문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6) 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

질문 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7) 가능합니다.

- ※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임대(10년) 등 각종 공적의무 부담하는 점 감안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

질문 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답변8) 추후 양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구획별 양도 시 해당 양도 구획을 1주택으로 봄

질문 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9)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

구 분	사례①	사례②	사례③
계약 기간	2년	2년	1년
실제 임대기간	1년 7개월	2년 2개월	2년
의무 임대기간	인 정	인 정	인 정

- ①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1년 7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

구 분	사례④	사례⑤	사례⑥
계약 기간	2년	1년	1년
실제 임대기간	1년	8개월	1년 2개월
의무 임대기간	불 인 정	불 인 정	불 인 정

-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상생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

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

구 분	사례①	사례②	사례③
계약 기간	3년	2년	1년
실제 임대기간	2년 6개월	2년 2개월	2년
의무 임대기간	인 정	인 정	인 정

- ① 3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년 6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

구 분	사례④	사례⑤	사례⑥
계약 기간	2년	1년 6개월	1년
실제 임대기간	1년	1년	1년 6개월
의무 임대기간	불 인 정	불 인 정	불 인 정

-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질문 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10)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전세↔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 “연 10%”와 “기준금리(6.23일 현재 연 1.75%)+연 2%” 중 낮은 비율

- ☐ 예1*)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 ☐ 예2*) 월세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억 8천 9백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 2022. 7 -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2
 -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화
FSS지적사례발표기관/2206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 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개)

공개 시기	'19.12월	'20.8월	'21.6월	'21.12월	'22.6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년 ~ '19년	'15년 ~ '17년	'20년	'11년 ~ '14년	'21년	'11년 ~ '21년
공개사례 수	29	37	15	27	15	123
① 매출·수익인식	4	12	5	4	4	29
② 지분·금융상품	4	6	5	4	3	22

③ 재고자산	3	1	-	-	1	5
④ 유·무형자산	4	4	1	-	2	11
⑤ 기타자산·부채	7	5	2	8	2	24
⑥ 주식미기재	2	3	1	4	1	11
⑦ 기타	5	6	1	7	2	21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원가

-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계속)

□ 무형자산

- C사는 甲사와의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甲사가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

□ 파생상품자산·부채

- D사는 복합투자상품(CB 및 BW)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 '23년 상반기 중 '22년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붙임1
2021년 감리 지적사례 목록
① 매출·매출원가(4건)

1. FSS/22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2. FSS/2206-02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3. FSS/2206-03 진행률 산정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4. FSS/2206-04 매출 허위계상

② 투자주식(2건)

1. FSS/2206-05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2. FSS/2206-06 지분법적용주식 과대계상

③ 재고·유형·무형자산(3건)

1. FSS/2206-07 재고자산 과대계상
2. FSS/22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3. FSS/2206-09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④ 기타 자산·부채(3건)

1. FSS/2206-10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2. FSS/2206-1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 FSS/2206-12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⑤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2건)

1. FSS/2206-13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2. FSS/2206-14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⑥ 기타 지적사항(1건)

1. FSS/2206-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